

제294호(2011. 1. 24)

■ 경제 동향

- 2010년 1~11월 누적 국내 건설수주 19.4% 감소

■ 정책 · 경영

- “1·13 전세대책, 다각도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엔 의문”
-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예고”

■ 정보 마당

- ‘주택 소비자 금융’의 질적 양적 성장으로 선진화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공정사회와 불공정거래」

2010년 1~11월 누적 국내 건설수주 19.4% 감소

- 10~11월 급락세가 원인, 공공토목 및 공공주택 감소폭 커 -

■ 1~11월 누적 건설수주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 10~11월 급락세로 감소폭 확대

- 2010년 국내 건설수주의 1~11월 누적치는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한 71조 9,673억 원을 기록함.
- 특히, 1/4~3/4분기까지 국내 건설수주 누적치는 전년 대비 6.2% 감소에 그쳤으나, 10~11월 건설수주의 급격한 하락세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됨.
 - 공공수주는 10월과 11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75.1%, 61.6% 급락했으며, 민간수주도 각각 47.2%, 41.9% 감소함.
 - 건설수주 누적치 증감률은 9월 -6.2%에서 11월 -19.4%로 13.2%p나 하락함.
- 공공수주의 1~11월 누적치는 전년 동기 대비 47.0% 감소한 24조 1,710억원을 기록
 - 공종별로는 토목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51.5%가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음.
 - 주택수주 또한 LH공사의 재정난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7%나 감소
 - 비주택수주는 다른 공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8.6% 감소를 기록
- 1~11월 민간부문 누적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47조 7,963억원을 기록함.
 - 토목수주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설비투자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함.
 - 주택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에 그침.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 제도가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택수주가 10~11월 각각 59.8%, 41.9% 급감, 누적치 증감률이 9월 29.4%에서 11월 1.9%로 27.5%p나 떨어짐.
 - 비주택수주는 민간 기업들의 공장설비 증대의 영향으로 20.1% 증가

<2010년 1~11월 누적 건설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09.1~11월	89,323.2	45,592.6	34,267.1	11,325.5	6,813.8	4,511.7	43,730.5	8,190.5	35,540.1	22,639.7	12,900.3
2010.1~11월	71,967.3	24,171.0	16,615.6	7,555.4	3,430.0	4,125.4	47,796.3	9,236.9	38,559.3	23,068.3	15,491.0
증감률	-19.4	-47.0	-51.5	-33.3	-49.7	-8.6	9.3	12.8	8.5	1.9	20.1

자료 : 통계청.

■ 건축공종 중 주택수주 부진, 공장과 관공서 수주는 호조

- 건축공종 중 주택수주와 사무실 및 점포 수주가 2009년보다 부진했으나, 공장 및 창고 수주와 관공서 수주는 높은 호조세를 보임.
 - 1~11월 주택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0.0% 감소해 9년 내 가장 부진한 실적인 26조 4,983억원을 기록함. 민간 주택수주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공공 주택수주가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주택수주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사무실 및 점포 수주는 14.5% 감소한 7조 919억원을 기록함. 그러나, 이는 초고층빌딩 수주가 활발했던 2009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금액 자체는 2008년 이전보다 양호함.
 - 공장 및 창고 수주는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74.7% 증가함.
 - 관공서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 1~11월 누적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액인 5조 8,596억원을 기록함.

■ 토목공종 대부분 감소, 발전 및 송전 등 플랜트 수주는 호조

- 토목공종의 경우 발전 및 송전, 기계설치 수주가 증가했으나, 도로와 철도 등 대부분의 수주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함.
 - 도로 및 교량 수주와 철도 및 궤도 수주는 각각 55.4%, 77.7% 감소함. 2009년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수주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반작용으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함.
 - 치산치수 수주는 4대강사업 발주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수주가 63.6% 감소함.
 - 토지조성 수주는 46.5% 감소해 예년의 절반 수준인 2조 2,807억원을 기록함.
 - 발전 및 송전, 기계설치 수주는 각각 122.9%, 15.5% 증가함. 신울진 원전 수주의 영향으로 발전소 수주가 급등했으며,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설비 수요가 늘어나 플랜트 관련 수주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치산치수	토지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설치
2009.1~11월	29,453.5	8,290.5	3,102.1	4,271.1	1,748.3	12,431.7	8,215.8	4,938.3	4,265.3	1,982.5	5,739.5
2010.1~11월	26,498.3	7,091.9	5,418.1	5,859.6	1,246.8	5,544.4	1,831.9	1,798.0	2,280.7	4,418.1	6,628.2
증감률	-10.0	-14.5	74.7	37.2	-28.7	-55.4	-77.7	-63.6	-46.5	122.9	15.5

자료 : 통계청.

박철한(연구원 · igata99@cerik.re.kr)

“1·13 전세대책, 다각도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엔 의문”

- 매매시장發 전세 불안, 공급 확대만으로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어려울 듯 -

■ 공공과 민간의 소형·임대 주택 공급 확대 지원

- 정부는 물가안정대책회의(1.5), 당정협의(1.7) 및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1.13)를 거쳐 1.13일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발표
- 공공부문에서 소형·임대주택 약 13만호를 2011년 내 공급할 계획임.
 - 공기 단축 등을 통해 입주 시기를 조기화하여 소형 공공 분양과 임대주택 9.7만호 입주
 - 공가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300호를 일반국민에게 즉시 공급.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절차를 단축하여 2.6만호 공급 예정
 - 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물량(2010.12 기준 2,554호)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
- 민간부문의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특별자금 지원 및 관련 규제 완화
 - 소형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2%)의 건설자금을 2011년 말까지 특별 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
 - 상반기 중 임대주택 세제 지원 요건 개선(안)을 마련하여 민간 임대사업의 활성화 지원

■ 자금 및 물량 조정 통한 시장 안정화, 실거래 정보 제공으로 임차시장 선진화 유도

- 전세자금 지원 확대 및 멸실 물량 조정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화 도모
 -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2011년 총 대출 규모를 현행 5.7조원에서 6.8조원까지 확대할 방침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어 인근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할 계획
-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으로 임차시장 선진화 유도
 - 2월부터는 호가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 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케 함.
 - 이 달 말부터는 상세한 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 정보를 매월 공개할 예정임.

■ 매매시장 침체에 따른 임차 수요 증가가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

- 공급 물량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 강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격을 상승시킴.
 - 2010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17만호(부동산114 기준)로 전년비 8.2% 증가하여 공급물량이 적지 않았음에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7.2%(국민은행 기준) 상승함.
 - 국민은행의 전세수급 동향에서 수요 강세 지수가 72.1%(2010년 12월)에 달함. 실제 입주물량이 적지 않음에도 입주물량이 적었던 외환위기 직후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 매매시장 침체에 따라 임차 수요에 머무르거나, 자가에서 임차로 이동하는 수요 급증
 - 2010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2.9%, 국민은행 기준)에 따라 주택 구매를 유보하고 임차 수요에 머무르거나 임차 수요로 이동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으로 자본수익률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총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가를 상승시키거나, 전세를 월세로 이동하여 소득수익률을 높이려고 함.
 -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 수준인 전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향후 자본 수익률을 기대한 레버리지 효과임.
 - 그러나, 과거와 같은 자본수익률을 확보할 수 없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가를 올리거나, 월세 전환을 통해 소득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할 것임.

※ 국민은행 임대차 분포 중 보증부 월세 비중 2009년 12월 39.5% → 2010년 12월 41.2%

■ 매매시장 침체시에는 전세가격 안정 달성하기 어려워

- 전세가격 급등의 원인은 임차시장 내부적 수요·공급 요인보다는 매매시장 침체의 영향력이 가장 큼.
 - 매매가격의 상승(자본수익률) 없이는 매매 수요의 임차 수요 이전 및 임대인의 소득 수익률 확보 노력 등이 지속되어 전세가격 안정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임.
-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공급시스템 마련·임차시장 선진화 유도 등은 효과적인 정책이나,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이 매매시장에 있다는 점에서 매매시장 연착륙과 거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오히려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예고”

- 금융제재·입찰참가제한·적정노무비 확보방안 등 강구 -

■ 임금 체불 및 유보 관행, ‘공정 · 친서민’ 등 사회적 가치에 위배

- 정부는 대표적 서민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유보 문제가 최근 화두로 부각된 ‘공정 · 친서민 · 상생’ 등 사회적 가치에 배치된다는 인식 아래 임금 체불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고용부는 2010.9.27.~10.31 간 1,368개소의 건설 현장(원청 271개소, 하청 1,097개소)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등 금품 체불이 410개 업체에서 39억 200만원 (피해 근로자 8,398명)이 발생하여 점검 업체의 30%에서 체불이 발생했다고 발표함.
 - 또한, 정기적인 임금 지급일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22억원(129개 업체, 4,436명)에 달하여 유보 임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상생 · 공정을 구현하려면 건설업체의 ‘제값 받아 제값 주기’가 가능하도록 저가낙찰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고용노동부, 2010.12.21)

-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 거래 등에 불이익 부여 및 상습 체불시 구속 수사 (법무부, 고용부, 금융위원회)
 - 「근로기준법」을 개정(2011년 중, 공표 등 법적 근거 마련), 2011년 중 시행
 - 체불 사업주 DB를 구축, 관계 기관(조달청 등)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한 전산망 구축 · 운영(고용부)
- 체불 업체는 일정 기간(최대 2년) 공공공사 참여 배제(기획재정부)
 - 「근로기준법」(2011년, 체불업체 명단 공표) 및 관련 국가계약법령 개정(2011년 중)
- 체불 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 적격심사(300억~50억원 이상 공사)에서 하도급업체가 체불 업체인 경우 수급업자(입찰자)는 감점→체불 업체의 하도급 참여 배제 및 체불 예방 노력 유도(기획재정부)

-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의 임금 지급 지도 강화(국토해양부)
- 유보 임금 해석 명확화 및 불합리한 근로 계약 관행 개선(고용부)
 -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 지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명확화 및 법적 조치
 -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한 서면근로계약의 체결 · 교부를 지도, 의무화 시행(2012.1.1)
 - 포괄임금제 적용지침을 마련, 불합리한 근로 계약 관행 개선
- 체불 · 유보 임금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체불 청산 지원(고용부)
 - 근로감독 강화(정기감독 연 1회→정기감독 연 2회, 필요시 수시)
 - 건설 임금 체불 발생 「사전알림 신호체계」 도입, 적색현장 상시 관리
 - 지방고용노동관서(체불청산지원팀)에 노무사를 배치, 신속 청산 지원
-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 방안’의 마련과 단계적 도입 방안의 검토(고용부, 국토부)
 - 2011년도 중 전문가 연구 등 심층 검토를 통해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
 - ※ 검토 가능한 방안(예시) : 발주 단계에서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 또는 공사원가 계산에서 산정된 직접노무비를 그대로 투찰, 공사 기성 또는 공사 준공 이후에 발주자는 실제 노무비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원도급자와 정산 방안 등

■ 2011 대통령 업무보고(국토해양부, 2010.12.27)

- 임금 체불 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심사시 임금 체불 여부를 심사 항목에 반영(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개정, 2011.9)
- 임금 체불 발생 가능성 최소화 방안 마련
 -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의 노무비 입 · 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알리미 서비스를 건설근로자에게까지 확대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확보 방안 마련
 - 공공공사의 경우 적정임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재정부 및 고용부)

심규범(연구위원 · gbskim@cerik.re.kr)

‘주택 소비자 금융’의 질적 양적 성장으로 선진화*

- 획일화된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구조적 개편 필요, 자본시장도 함께 발전할 기회 -

■ 주택 소비자 금융시장 규모 10년 만에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

- 지난 10년 동안 주택 소비자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질적인 성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미흡한 실정
 - 소비자 금융시장(모기지시장)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요자 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자리론, 민간 금융기관의 주택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는 약 387조원(2010.5)으로 추정됨.
 - 명목 GDP 대비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35%에서 2009년 65%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저금리,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금융기관들의 대출 경쟁에 의한 모기지시장의 성장에 기인함.
 - GDP 대비 부채 총량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나 장기 대출시장과 2차 모기지시장의 미발달, 가처분 소득 대비 높은 지급이자율, 소비자에 맞춘 다양한 대출상품의 구성 및 차환대출시장의 미형성 등 한국의 주택금융시장은 아직 양적·질적 발전의 과제가 남아 있음.

■ 여전히 공급자 위주에 상품의 다양성 낮아, 장기 모기지 시장 및 보험/보증시장 미발달

- 한국 모기지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 변동금리에 단기 대출이 많다는 것임. 또한 소비자의 여건이나 재무적 특성, 자금 수요 형태에 따른 다양한 대출 상품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은 최장 35년 만기 상품이 있으나 이용도가 낮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격차가 크고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있음
-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자에 대한 모기지 보증 및 보험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함.

* 이 원고는 2010년 주택협회로부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수탁받은 「주택산업 선진화 방안」의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소득 수준 대비 높은 편이어서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집값의 절반을 넘기 어려움.
 - LTV 및 DTI 등의 금융 규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매우 미약한 실정임.
- ※ 2007년 민간모기지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함. 이는 국내 모기지보험제도의 차주와 대주의 리스크 관리 차원보다는 LTV 규제를 회피해 추가 대출을 실행하려는 회피 수단으로 더 이용되었기 때문임.

■ 장기 모기지시장 발달을 위한 모기지 보험과 2차 시장의 활성화 필요

- 모기지 대출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 모기지시장의 형성을 통한 시장의 선진화 필요
 - 장기 모기지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으로서 2차 모기지시장의 활성화, 모기지보험과 보증을 통한 수요자들의 신용 공여 및 리스크 관리 등 여러 과제가 선결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이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차 모기지시장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자가 소유 지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에 주력
 - 자가 소유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 보증을 통한 간접적 지원에 주력하며 중산층의 주택 구매는 민간 모기지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반면, 국민주택기금은 구입 자금의 지원보다 임대주택 건설과 임대료 지원, 한계 계층의 모기지 보증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주택소비자 금융시장의 선진화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유발함으로써 수요자에게는 원활한 주택구매 지원, 공급자에게는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
 -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야기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감독 기능을 추가하는 결과를 야기하면서 주택 소비자 금융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으나 한국은 건전한 형태로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

김연아(연구위원 • hakim@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18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주최 ‘예산 집행 효율화 자문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장철기 연구위원 참여 - 공공건설 부문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화 방향성 수립을 위한 자문
	대한건설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민자팀 주최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권오현 실장 참여 -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시행사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안에 대한 자문
1.19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안전정책관 주재 ‘예산 집행 설계시공분과심의회’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 참여 -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VE 활동 강화 등 기술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문
1.21	한국수력원자력·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식경제부가 공동 주최한 ‘2011년 에너지기술개발 원자력 부문 계획 제2차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 참여 - 원자력 건설과 관련된 사업관리 방향에 대한 자문

■ 2011년도 현안토론회 개최

- 연구원은 1.21(금) 연구원 9층 연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연구원 현안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현안토론회에서는 각 연구부서별로 2011년도 주요 연구 현안들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연구방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 연구직원 모집

- 연구원은 건설계약 및 산업정책 등 정책연구를 담당할 연구직원을 공개 채용함.
- 응시자격 : 석사학위 이상(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 전공 : 경제, 행정, 법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분야(연구경력자 우대)
- 채용직급 : 연구위원급(단, 석사학위 소지자는 연구원급 임용을 원칙으로 함)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연구발표 및 면접(서류 합격자에 한함)
- 제출서류 : 입원원서(연구원 소정양식), 학위논문 및 3년 이내 연구실적물, 국문요약서, 성적증명서
- 접수기간 : 2011.1.31(월) 18:00시한(해외거주자는 E-Mail 접수 가능)
- 접수처 및 문의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업무지원팀(Tel. 02-3441-0837, E-Mail : nhk1006@cerik.re.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 www.cerik.re.kr 참조

「공정사회와 불공정거래」

공정사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공정하지 못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제대로 된 상품이 제 값에 거래가 되는 것이 공정사회다. 정부의 공정사회는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보다 공급자와 공급자 사이, 즉 하도급 거래 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공공공사에서 발주자와 계약자 사이보다 계약자 내부 거래인 하도급 구조와 거래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하도급에서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길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가 1차 거래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공공계약이 원인을 제공할 여지가 없는 지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일반적으로 공공공사에서 정부가 산정한 예정가와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에는 많게는 40%까지 차이가 난다. 무차별적인 저가 입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공공공사 가격의 반 이상이 거품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국감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 국고를 낭비했다는 질타가 국회의 단골 메뉴가 되어 버렸다. 정부는 설계변경에 대한 폐단을 감소시키기 위해 입찰 방식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도입하는 목적은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고 명분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두고 있다. 본래 취지와 달리 원도급자에게 과도한 책임 부과 때문에 불공정 소지가 보인다.

순수내역입찰방식에서 시공계획 및 공법설계를 입찰자에 부담시키면서 이에 대한 보상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입찰 과정에 당연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기존 방식에서의 입찰가격 평가방식을 거의 준용하면서 계약 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자에게 부담시키려 한다. 그러면서도 평가방식은 과거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양복을 재단하는 데 소요되는 재봉틀의 종류와 대수를 발주자가 결정해놓고 원단의 가공단가를 평가하는 게 과거 방식이다. 순수내역입찰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재봉틀 대신 수작업, 직접가봉 대신 외주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입찰자가 제시한 시공계획과 공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판단은 발주자의 전문지식과 상당한 경험을 필요로 한다.

올바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기반과 발주자의 역량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을 경우 피해는 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 그리고 약자인 근로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위험성이 높다. 원도급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의 부작용이 하도급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는 도입 제도의 기반과 발주자 역량을 충분히 갖춰 놓은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아주경제, 2011. 1. 12>

이복남(연구위원 · bnlee@cerik.re.kr)